



서울·경기 양계협동조합 강희구 조합장에게 듣는다.

정리 : 김 용 화 기자

기자 : 양계산업은 계속되는 불황으로 생산자들은 많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를 통해 강조합장님께서 체험하신 많은 경험상의 고견을 전달해 양축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간을 내주십사 하고 부탁을

각입니다. 생산자들이 더이상 살 수 없다고 아우성을 칠 정도가 되다보니 늦게나마 유통구조개선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인데 양계협동조합설립 추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생산자를 위한 조합을 직접설립해야 한다.

드렸습니다. 주로 협동조합설립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합니다. 우선 생산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유통구조 개선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갖는 특성중 유통문제에 관한 것을 강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88년에 접어들어 두드러진 현상은 수입개방 문제와 연관되어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간 그런대로 음성적으로 압박을 가하던 상인과의 마찰이 경영에 직접적으로 표출되면서 이제는 생산에 전념만 한다고 소득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이렇다할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지 못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정부정책이 생산조절에 의한 문제해결을 우선시 해왔기 때문에 유통조직에 관심이 없다보니 그 문제점이 이제 한계점에 온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소비에 따른 공급조절 방식으로 유도하면서 과감한 유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

가격결정에 참여할 기구가 있어야 한다

강희구 : 양계산업에서 가장 큰 모순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자기가 생산한 산물을 자기 마음껏 처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제값받기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산물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생산자들이 전혀 참여를 할 수 있는 기구도 없고 또한 힘도(영향력) 가지고 있질 못합니다. 그렇다고 생산자들이 농장을 떠나서 유통에 참여하여 산물을 직접 판매까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역시 생산자는 생산에만, 유통담당자는 유통에만 전념하는 방법이 제일 효율적입니다. 대자본가야 혹 판매점까지 갖출 수 있다고 볼수도 있지만 대다수 양계인들은 모두 영세하므로 영세한 사람들끼리 모여 공동의 사업을 수행해나간다는 차원에서 볼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협동조합설립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양계산업에도
유통구조개선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자: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양계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생산자에겐 어떤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협동조합은 인적인 결합체이다

강희구: 협동조합의 근본 이념은 우선 인적결합체가기 때문에 주식회사와는 다릅니다. 경제력 위주보다는 물심여일(物心如一)에 입각해서 인(人)적인 결합을 최우선으로 하여 영세한 사람들이 인위적인 유대를 맺어 대자본가와 대항하면서 권익보호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양계인들의 85%가 영세농가입니다. 이점 하나만으로도 협동조합설립을 추진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세하다 보니 생산한 산물이 밀릴까 걱정되어 어떻게든 팔아먹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에 상인들이 농간을 부려서 생산자를 울리고 있습니다. 계란의 경우에는 저장성이 없다보니 더욱 상인들에게 2, 3중가격 또는 후장기(後帳記)제도와 같은 방법으로 당하게 됩니다.

물론 판매시장이야 얼마든지 있다는 것 짚은 알고 있

지만 직접 수송력과 저장시설이 없으며 자금과 노동력 상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직접판매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사업을 조합을 설립하여 자금을 모아서 유통을 전담케 한다면 상인에게 빼앗기는 중간 유통마진을 찾게되면 그만큼 당장 이득을 보게 됩니다.

기자: 말씀을 듣고보니 양계업자들이 살아갈 길은 현재의 유통구조를 어떤 형태로건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이 잘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었을 경우 생산자들이 도움을 받게 되는 것 외에 얻어지는 이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소비자를 의식해야 할 때다

강희구: 어떤 산업이건 자금을 아무리 투자해서 제품을 생산한다해도 소비자가 없어 상품이 소비되지 않는다면 그 산업은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소비자는 왕이다”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로 타산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생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끔 유통구조의 결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꿀탕을 먹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어

소비자들은 소비자 협동조합을 만들어 배척을 하고 있는 수준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양계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자들은 아직도 소비자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고 중간상인하고의 관계만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를 의식해야 하는 시점에서 현재와 같은 방법의 유통구조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하루속히 전 생산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생산자들은 소비자를 도외시한 채 안일한 생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소비자들은 양계산물 구입에 있어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의 높은 차이, 즉 유통마진이 너무 커서 이에 따른 부담이 큰 실정이고 신선도에 있어서도 문제입니다. 문화수준이 높아 질수록 위생적이고 신선한 상품쪽으로 선택방향이 바뀌어 가는데 요즘 계란을 생각해 보면 걱정입니다. 이리저리 옮기는 과정에서 시일이 걸리다보니 주부들이 계란을 깨뜨렸을 때 노른자가 탁 풀어지는 수가 왕왕 있다 하는데 그 광경을 본 주부들이 계란먹을 맛이 나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유통단계를 줄여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기자: 그런데 문제는 대개의 생산자들이 협동조합설립의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과감하게 시도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모든 것을 정부가 주관해서 추진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기 때문인 듯 합니다. 관계협동조합의 모순이 지적되고 있는 때에 과연 정부주도의 조합설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의문입니다. 직접 조합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점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협동조합설립은 생산자가 직접 추진해야 한다

강희구: 양계업자 10명만 모이면 지금도 협동조합은 정부에서 해줘야 한다고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협동조합설립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안됩니다. 각 지방에 산재해 있는 생산자들이 스스로 참여해야 합니다.

만일 관이 주도가 되면 협동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이 되지 못하고 조합 자체만을 위한 운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말로는 조합원을 위한 조합운영을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부에서 해야할 일이

있다면 협동조합설립 및 운영시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생산자들이 전부 해야할 일뿐입니다.

기자: 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이미 조직된 구역내에서는 동일 조합설립을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내에서는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과 위치상 거리가 멀고 또는 육계와 채란계로 협동조합을 구별해서 설립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어 이에 따라 논란이 있는듯 합니다. 이점은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지역별 조합설립에 능동성 쥐야한다

강희구: 현재 동두천이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과 거리가 멀어 잘 안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조합에 10여명이 가입하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가입은 100%가 되기 어렵습니다. 가입·탈퇴의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모든 생산자가 가입을 하겠습니까? 서울과 거리가 멀어 못한다는 말은 좀 문제가 있고 다만 관심이 없거나 협동조합의 특성을 모르는 것 뿐입니다. 의정부에도 조합원이 있고 광주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수가 많진 않습니다.

양계협동조합을 세분화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법에 이미 조직된 구역내에서는 설립을 못한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앞으로 법이 개정될때 뼈버릴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단위조합을 구성하겠다는 생산자들의 요구가 있으면 제한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미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지역조합설립을 제한한다기보다 지역별 조합설립에 능동성을 쥐야할 것입니다. 헌법에도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협동조합을 조직하는데 동일관내에 1개 이상 못한다는 것은 행정을 다루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지 조합의 기본정신에 입각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개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기자: 주도는 생산자들이 하고 정부는 그야말로 국민의 공복으로서 운영이 잘 되도록 최대한 협조를 다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현재와 같은 행정방향에 비추어 볼 때 생산자들이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생산자가 스스로를 위한다는

“협동조합설립은 생산자들이 직접 추진해야 운영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정부는 다만 운영이 잘 되게끔 도와주는 것밖에 없으며 어떠한 제한을 가해서도 안된다.”

각오로 협동조합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때 좋은 방안이 나오고 쉽게 설립이 가능하지 않겠나 합니다. 점차 모든 부분에서 민주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잘 풀려나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점이나 우리 양측가들이 이 점은 미리 염두해 두어야 할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지요

협동조합운영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

강희구 : 일부 관변측이나 현재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협동조합이 완전히 민주화되면 망할데가 많다고 걱정하는데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협동조합운영도 경제행위의 하나로 운영을 잘하면 번창하는 것이고 운영이 부실하면 망하게 되는 것이지 천편일률적으로 잘되게 밀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이것까지 정부에서 걱정합니까. 경제행위의 자율성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복잡성 협동조합입니다. 생산자 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이 나름대로 발전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합니다. 생산자협동조합이 복잡성을 띠어 생산, 판매, 구매, 금융을 취급하니까 기본설립 목적에서 자꾸만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가장 손쉬운 운영 방법이 금융업이다 보니 조합원의 상호금융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일반 거래인을 전부 상대하는 은행기업식의 금융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쳐서 생산자를 위한 조합이 되게 해야 합니다. 빨리 조합의 근본 이념을 찾아 6대원칙에 입각해서 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1인이 1표밖에 선거권이 없듯이 협동조합도 조합원이 되면 누구나 출자금에 상관없이 임원선거나 의결권에 1명이 1표밖에 행사할 수 없게 되어야 합니다. 이윤배당도 마찬가지로 해야합니다. 출자금

액에 비례해서 하게 되면 조합의 이익만 생각하게 되지 조합원의 이익은 생각치 않게 됩니다. 결국 상호부조의 정신이 없어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 조합은 출자금에 대해서 출자배당을 10% 이상은 못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은행금리의 저축성이 자가 10%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출자배당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인적인 결합체이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잉여금 배당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조합의 이용도가 높아 잉여금 생산이 많아졌을 경우에는 많이 이용한 사람이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원칙에서 볼때 잉여금 배당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 조합이 부실하다고 봐야합니다. 조합원이 조합을 이용했을때 직접 이익을 환원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축협에서 군납할때 4.5%의 수수료를 받는데 계란이 40원한다면 수수료를 4%만잡아도 1원60전입니다. 이것은 조합이 아닙니다. 이용여신도는 많다고 하더라도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조합이 부실한 것입니다. 해서 우리는 조합원이 실어오고 10~20전을 받고 있으며 많을 때에도 50전 이상은 안 받습니다. 얼마나 조합원들이 이득인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해 조합이라는 것은 영세한 사람들이 인적으로 결합해서 공동으로 살아가는데 적합한 조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고 그것을 누가 누구를 위해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스스로 생산자를 위해 조합을 설립해야만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기자 : 조합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읽고 나면 많은 생산자들이 조합의 필요성과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을 확실하게 정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조합설립을 원하는 지역에 적극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구**